

습지 훼손해가며 주차장 만든다는 광산구

보호가치 높은 황룡강 장룡습지 3㎢에 축구장 등 조성 추진 논란
광주시 지난해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 건의…환경부도 긍정적
환경단체 “광산구·지역국회의원 반대에 보호구역 지정 제동” 반발

지역 환경단체가 광주시 광산구 황룡강 장룡습지에 대해 ‘국가습지 보호구역’ 지정 촉구에 나섰다. 광주시와 환경부는 장룡습지에 대해 국가 보호구역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부 광산구 주민들은 습지 인근에 주차장·축구장 조성이 추진되는 점을 들어 보호구역 지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는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황룡강 장룡습지를 국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장룡습지가 국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황룡강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광주시는 무등산 국립공원과 더불어 황룡

강 국가습지라는 생태자원을 통해 물순환 선도 이미지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구역 지정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광산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모 지역 국회의원이 주민 이익을 논리로 반대하며 제동이 걸렸다”며 “장룡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주민들의 이익과 대결하는 구도로 몰아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장룡습지는 광산구 호남대학교 인근에서 송산유원지 인근 영산강 합류점까지 약 3㎢에 달하는 구간이다. 멸종위기 1급인 수달·통사리, II급인 삼·말뚝가리 등 184종의 동물과 292종의 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2년 간 광주 전 지역의 습지생태 현황조사를 펼쳤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장룡습지를 선정했

다.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부에 장룡습지 국가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했고, 지난 6일 환경부 조사결과 장룡습지는 ‘보호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산구청은 지난 2017년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장룡습지 인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습지 중간 지점에 축구장과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었다.

광산구청과 지역 국회의원, 일부 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며 환경부와 맞섰다.

논란이 가열되자 광산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해 주차장 등 편의시설 부지를 습지 상류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부지를 변경하면 주민편의시설도 조성할 수 있고 습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변경부지 또한 습지와 인접하고 있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도심 물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은 주민

편의시설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 부지에 조성되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며 “하천과 습지 등은 투수층 역할이 크기 때문에 광주시가 진정으로 물순환 선도도시를 추진한다면 하천 부지 개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수십 년전 사라진 경양방죽을 다시 살려 도심의 경관과 브랜드로 삼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습지나 연못 등 자연 환경은 전 세계적으로 도시의 주요 인프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자연 환경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있는 습지까지 해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전국 165개의 습지가 도로 등 시설물 건축과 경작지 개발을 이유로 소실되거나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광주·전라 지역에 속하는 습지는 64개(소실 12·훼손 52)로 전체 40%를 차지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동구, 무등산 난개발 대응 나섰다

매뉴얼 마련 엄격 심의…광주시에 경관지역 포함 건의키로

무등산 자락이 난개발과 불법 형질 변경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2018년 12월25일자 6면)에 대해 동구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구는 무등산 일대 개발행위 허가 시 자체적인 개발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이 일대 3곳에서 단독주택 건립 등 개발행위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2곳은 임야 일부를 훼손하거나 불법 형질 변경을 시도해 관할 행정청인 동구가 개발업자를 고발조치했었다.

동구는 편법적인 개발행위와 산지 불법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10일 오후 구청 상황실에서 ‘무등산 난개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무등산보호

20여 명이 참석했다.

자문회의에서는 현행법에 따른 개발 행위허가 기준, 불법행위 발생 시 행정처리 절차,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 시 추가 검토사항 등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무등산 자락 훼손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개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구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개발업무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수·지산동 무등산 자락을 건축허가 전 ‘경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경관조례에서 정한 ‘경관지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광주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개발과 녹지보존의 조화를 유도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무등산 자락 개발행위 허가를 엄격히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승용차로 지인 두차례 치어 숨지게 한 60대

“압도적 범행증명 없다” 2심서 살인혐의 무죄

음주운전만 인정 징역 1년2개월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데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30일 새벽 3시40분께 여주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지인 B(62)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원 인근 술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고 나와 노래방에 가는 것을 놓고 주차장에서 다뤘고 승용차로 주차장에 쓰러진 B씨를 두 차례 밀고 지나갔다.

경찰은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 A씨를 특가법상 도주(뺑소니)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A씨가 차로 B씨를 2차례 지나친 점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두 사람은 그동안 막역한 사이로 지내는 등 살인의 동기와 목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요금 인상 광주 택시 미터기 조정 분주…서비스도 개선될까



택시기본요금 인상(2800원→3300원) 첫날인 10일 광주시 북구 영락공원 입구에서 미터기 조정을 위해 택시들이 차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A형 이어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첫 검출

개인 위생 철저 당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0일 “1월 둘째 주에 실시한 인플루엔자 병원체 표본감시 결과,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8~19절기(9월~다음해 8월) 광주지역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첫 검출한 이후 올해 1월 둘째주까지 모두 37건의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이 가운데 A(H1N1) pdm09형이 33건

(89.2%), A(H3N2)형 3건(8.1%), B형 1건(2.7%)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번에 첫 검출된 B형 인플루엔자는 빅토리아형 계열로 3가와 4가 예방백신 모두에 포함된 바이러스이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핵산의 유형에 따라 크게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 A형과 B형 모두 중증도 내지 중증 경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모든 연령에게 감염될 수 있다.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주로 소아들에서 감염을 일으키며 항원형에 따라 빅

토리아형과 야마가타형 두가지 계열로 나뉜다.

광주시 서진중 감염병조사과장은 “인플루엔자는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끼리 전염되는 만큼 기침이나 재채기에 의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묻은 비말을 만진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또는 코를 만질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며 “기침 예절과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출소 12일만에…또 절도

광산경찰, 40대 영장 신청

광주광산경찰은 10일 출소한 지 12일 만에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김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A(여·71)씨의 1층 주택에 들어가 안방에 있던 휴대전화 1대와 현금 2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절도 4건·절도미수 3건 등 총 8건의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일주일 전에 물건을 훔친 A씨의 집을 8일 오전 11시께 다시 들어갔다가 A씨의 아들(30)에게 붙잡혔다.

A씨의 아들은 김씨가 자신의 어머니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절도범으로 생각해 붙잡았다. 당시 김씨는 훔친 물품을 돌려주겠다며 용서를 빌었고, A씨 아들은 김씨를 딱하게 여겨 휴대전화로 얼굴 장면을 촬영한 뒤 돌려보냈다. 하지만 김씨는 잠적했고, 얼굴사진을 통해 탐문에 나선 경찰에 의해 4시간여만에 체포됐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출소 한달만에…또 차량 훔친 30대 구속

광주북부경찰은 10일 고가의 외제차량을 훔친 서모(3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박모(25)씨의 BMW 차량을 훔쳐 타고간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 15범인 서씨는 차량 절도로 1년4개월을 복역하고 지난달 5일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일을 하던 중 박씨의 차 안에서 열쇠를 발견해 몰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는 훔친 차량을 타고 다니다 지난 7일 오후 8시께 광주시 북구 중흥동의 한 도로에서 접촉사고를 낸 후 상대편 운전자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자 차량을 버리고 도망갔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두암동의 모텔 밀집지역에서 서씨를 붙잡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술 취한 50대 순찰차 가로 막고 ‘집까지 태워달라’ 행패



○…술에 취해 순찰차를 가로 막고 자신의 집까지 태워달라며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서행.

○…1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7)씨는 지난 9일 밤 9시5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쌍학공원 사거리 앞에서 순찰차를 가로 막고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20여 분간 화정지구대 소

속 이모(26)순경을 향해 욕설을 하고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했다는 것.

○…전과 13범인 김씨는 이날 순찰차를 택시로 착각해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 이 순경이 직접 귀가하라고 말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다 타면 출발

다 매면 출발

국민 안전을 위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고속도로는 물론 일반도로까지 확대/시행됩니다

*위반 시 운전자 과태료 3만원 (13세 미만은 6만원)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유아보육용 장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9월 28일,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